

# 한국당, 담뱃값 '셀프 인하' 추진 논란

### 홍준표, 대선 후보 당시 담배값 인하 공약 "서민들만 더 힘들어져"

###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당시 집권여당...인상 정책 주도

자유한국당이 26일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담뱃값을 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담뱃값 인하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홍 대표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담배 판매량은 인상 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났다"며 "서민들의 담배 소비량이 더 늘었고 결국 서민들만 더 힘들어졌다"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반대하는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만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정

책은 바로 잡겠다"며 "담뱃값은 내리고 비흡연자들의 건강추구권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더욱 부자하겠다는"고 약속했다.

실제 이번 담뱃값 인하 법안 준비는 홍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한홍 의원이 맡아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담뱃값 대폭 인상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자유한국당은 당시 집권여당이던 새누리당으로서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상 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흡연

율을 낮추겠다고 담뱃값을 20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올렸다. 이로 인해 지난해 담배 세수는 12조원을 돌파, 인상 직전 해보다 5조원이 더 걷히는 기록을 세웠다.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여당 시절 담뱃값을 인상했던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되자 세수 감소를 노리고 담뱃값 인하를 추진한다는 골치 많은 시선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의 초고소득자 증세에 맞선 카드 중 하나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태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담뱃값 인

하는 홍 대표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박근혜 정부 당시 잘못된 정책을 되돌린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으로서도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인데 반대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반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들이 올린 담뱃세를 내리자는 발상은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트한 것"이라며 "세금 문제는 일반 국민의 생활에 민감한 문제다. 정치권은 진중하고 정직한 자세로 세금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라디오방송을 통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야 얼마 전 자기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 인상을 해야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국민건강이 나빠져도 관철은지를 다시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 회의에 참석한 이혜훈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대표, 하태경, 김영우 최고위원.

## '증세' 논의 앞둔 국회 바른정당 주목받는 이유

정부·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증세'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함에 따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입장이 주목된다. 특히 대선 때부터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해온 바른정당이 증세에 관한 전향적인 해법을 제시, 여당과 손잡고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여당이 운을 댄 초고소득자 증세에 대한 바른정당의 즉각적인 반응은 '사과가 먼저'라는 구제적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세제개편안 협상에서도 나

### 바른정당, 보수정당이지만 대선때 증세 공약 자유한국당 완강 반대 속 '3당 공조' 관건

통령이 말한 재원소요 예상치가 잘못될 점과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었던 말을 취입 후 반복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나서 양해를 구하라는 요청이다.

그러나 바른정당은 이와 동시에 증세를 포함한 세법제도 논의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는 포석을 깔아두고 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24일 '증세에 대한 추가 입장'에서 "전면적인 세제개편안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이에 따라 바른정당은 적극적으로 세제개편 논의에 참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바른정당은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이번 추경 때처럼 쉽게 넘어가지 않고 단단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수정당이지만 대선 때도 '중부담 중복지'를 내세웠던 바른정당의 기조와 달아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유승민 후보는 법인세를 포함한 모든 증세를 고려할 것이며 조세부담률을 현 19%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22%까지 올리겠다고 TV토론에서 공약한 바 있다.

국회의 세법 개정안 논의에서 바른정당의 입지는 20석이라는 의석 수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추경과 마찬가지로 증세에서도 한국당은 원천 불가를 고수하는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협의의 여지를 뒀다. 이같은 구도에서는 추경 심사에서 나타난 3당 협력 국면이 세제개편안 협상에서도 나

### 이낙연 총리 "새만금, 국가적 자산 키울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경제허브' 새만금을 국가적 자산으로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에서 "새만금 사업을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를 위해 "공공주도 매립을 확대하겠다"며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관공래 저용지와 국제협력용지 매립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핵심 기반시설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난 해보다 대폭 늘리겠다"며 "새만금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더 많이 참여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한 "전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혁신도시가 국민연금기금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도시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전북의 탄소소재산업 등을 4차 산업 시대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 국민의당 지도체제,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선거 '가닥'

### 오늘 중앙위서 결정... "혁신위 안 보완 방향으로"



국민의당 박주선(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4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 지도체제 개편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선거 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정된 것은 없다. 내일 오전 11시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다)"면서도 "혁신위 안을 보완하면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선거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위 방향을 수용하되 그대로 수용하면 제약적 대통령제처럼 권한이 집중된다는 우려가 있

다"며 "당원들의 뜻도 지금과 같은 최고위원을 존속하는 체제를 (지지하는) 의견 많다. 혁신위안 수용하면서 그런 방향(분리선거)으로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10시 전준위에서 지도체제 부분이 논의될 것"이라며 "당원 여론조사, 의원총회, 중앙당 사무처장 총회, 원외 위원장 등 여론 수렴해

서 혁신위 안을 수정 보완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위안은 대표 권한을 강화시키지는 것"이라며 "(전준위에서) 분리 선거뿐만 아니라 대표 권한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강화할 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도체제 개편 절차에 대해서는 "당원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의결을 받아서 올려줘야 (중앙위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며 "전준위에서 의견을 정해서 개정안을 만들어서 내일 비대위에 보고하는 것이다. 그럼 비대위에서 수정하는 의결하든 해서 중앙위로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러 "(중앙위가) 인건을 독자적으로 올릴 수 없다. 뿐이지 올라온 안은 수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당 전준위(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날 지도체제 개편안을 마련한 뒤 27일 비대위에서 안건을 의결한 뒤 중앙위에서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김태일 혁신위원장은 지난 17일 단일지도체제 전환·최고위원제 폐지 등 고강도 혁신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비대위 내부에서 '최고위 폐지'에 난색을 표하면서 최고위원을 대표와 분리선출하는 절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지역공감·미래성장·정리정돈 **湖南新聞** 전인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